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권·권한이양이 핵심”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통합선언 후 첫 정책토론회

정부서 산업·문화·분권 이양받아야…특별법이 ‘성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기반이 된 통합을 위해선 일대일 대응 통합, 상향식 통합,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통합 선언 후 열린 첫 토론회로,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 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 등 6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을 ‘소외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과 분권형 통합 원칙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모델로는 ‘특별시’를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존돼야 한다”면서도 “향후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처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권한을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